

기후변화협약 정부전문가 세미나 및 제22차 부속기구회의 참가 결과보고

I

회의 개요

- **일시 및 장소** : '05. 5. 16(월)~27(금), 독일 본(Bonn)
 - 정부전문가세미나 : 5. 16(월)~17(화)
 - 기후변화협약 제22차 부속기구회의 : 5. 19(목)~27(금)
- **참가현황** : 157개 당사국, 국제기구, NGO 등 약 1,600여명
 - **한국 대표단**은 외교부 환경과학심의관을 수석대표로 29명 참석
 - 정부 : 외교부(2) · 산자부(2) · 환경부(2) 등 10명
 - 자문 : 예경연(4), 예관공(3), 환평연(2), 환경공(2) 등 19명
 - **환경부**는 국제협력관(5. 16~19), 온실가스저감기획팀장(5. 16~23), 조한진 사무관(5. 16~27) 참석
- **주요 논의의제**
 - 정부전문가 세미나(Seminar of Governmental Experts) 개최
 -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 의제별 논의
 - 완화 및 적응 분야 In-session 세미나

II

주요 의제별 논의 결과

1. 정부전문가 세미나(5. 16~17)

- ◇ 제10차 총회('04. 12) 결정에 따라 '향후 기후변화대응체제(Post Kyoto) 방향과 각국 기후변화 대응 노력'에 대해 발표 및 토론 진행
- * 우리나라(발표: 외교부 신부남 과학심의관)를 포함한 27개국이 입장 발표

□ 교토체제 이후 의무부담 논의 절차 및 원칙 등 제기

- 금년 말('05. 11. 28~12. 9, 몬트리올) 개최될 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(COP-11)와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(COP/MOP-1)에서 Post-Kyoto 체제에 대한 논의 진행 및 일정을 강제하는 'Montreal Mandate' 필요성 제기
- EU, 남아공(G77/중국 대표), 투발루(군소도서국가연합 대표), 스위스, 멕시코, 노르웨이 등이 Post-Kyoto와 관련한 기본원칙으로 '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' 강조
- 비용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, 시장 메카니즘(CDM·배출권거래제 등) 활용,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·전파 등에 대해서도 논의

□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선·개도국간의 인식 차이 확인

- 개도국(G77/중국)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적응(adaptation)을 강조
- EU는 온실가스 저감(mitigation)이 핵심이며 산업화 이전 보다 2℃ 이상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장

2. 제22차 부속기구회의 주요의제 논의결과

□ 非부속서 I 국가의 국가보고서 작성 관련 사항 합의

- 개도국의 국가보고서 제출주기를 4년으로 하되, 필요시 1년 연장 가능
- 기후변화 완화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전문가그룹(CGGE) 훈련 워크숍을 '05. 9. 26~ 30간 서울에서 개최기로 결정

※ 국조실, 외교부, 환경부, 산자부, 예경연 등이 협조하여 개최예정

□ 향후 당사국총회 개최 시기 및 장소 합의

- 제11차 당사국총회 및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는 '05. 11. 28~12. 9일간 캐나다(몬트리올)에서 개최
 - 고위급 각료회의는 COP11 및 MOP1과 공통으로 12. 7~9일간 개최하고 각 당사국 수석대표가 국가 입장(national statement)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
- 제12차 당사국총회 및 제2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일정은 '06. 11. 6~17일간 아프리카 지역에서, 제13차 총회는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

□ 2006~7년도 협약 사무국 예산 확정

- 2006~7년도 예산 계획은 미 달러화 가치하락 보전, 워킹숍 개최비용 등 협상 그룹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었으나 막판 타협으로 지난 회계연도에서 22% 증액된 예산안(미화 \$53,501,583불) 합의

□ 기후변화 영향, 취약성 및 적응 관련

- 「기후변화 영향, 취약성 및 적응 5개년 작업프로그램」의 범위, 절차, 방법 논의를 위한 비공식 워킹숍을 개최(장소 미정)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3차 SB에서 논의키로 결정

□ 기후변화 완화의 과학, 기술 및 사회경제적 영향 관련

- 기후변화 완화 워킹숍(COP10에서 개최)에서 제안된 주제들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를 금년 7. 15일까지 작성하여 논의키로 합의

□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론 조정에 관한 지침 최종 완성

-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조정(adjustment) 방법에 대한 기술지침 중 마지막으로 남은 LULUCF(토지이용, 토지용도 변경 및 임업) 부분의

조정방법에 대한 최종 기술지침 완성

□ 기술이전 전문가그룹의 2006년도 및 향후 사업계획 논의

- 2006년도 사업계획에 ‘공공기술 이전촉진 방안에 관한 후속사업’ 포함을 적극 검토

□ 기타 의제

- 선진국의 정책 및 조치 우수사례 전파, 개도국의 적응지원을 위한 기후변화특별기금 운영, 국제항공 및 해상운송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부문의 교토의정서 포함 여부 등은 합의 실패

Ⅲ

정부대표단 활동 및 주요 성과

□ 정부전문가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소개

- 기후변화 대응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, 제3차 종합대책 수립 등 국내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선진국의 기후변화관련 기술개발 및 확산 강조

□ 주요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한 상호협력 논의 및 협상동향 파악

- 미국 : New Climate and Development Partnership 논의
 -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치(target)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교토체제를 보완하는 것이며 참여여부는 개방적임을 설명
 - 6월 중에 동 파트너십에 대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개최할 계획(장소 미정)
- 중국 : 미국 파트너십에 대한 의견 교환
 - 미국의 구상(5. 24~25, Connaughton 미 환경위원장의 중국 방문 설명)이 의정서 체제를 보완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전문가간 후속협의를 갖기로 하였으나 미국 구상에 실제참여 여부는 불명확한 입장
- 인도 : 미국 구상에 대한 의견 교환
 - 미국 구상에서 기술협력 분야는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협력체 구성에는 유보적 입장

○ EU

- 배출권거래제 등 양측 정책 동향 및 향후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

○ 캐나다

- 당사국 총회 준비를 위한 예비회의 개최(금년 9월, 오타와) 계획 등 성공적인 11차 당사국 총회 개최방안 논의
- 양국간 청정개발체제 사업 활성화 협력방안 논의(CDM MOU 체결 및 사업 발굴 등)

○ 호주

- APEC 전문가 세미나의(4. 11~13, 서울) 성공적 개최 등 양국간 기후 변화관련 협력강화 방안 논의

□ 한국-멕시코-스위스간 EIG(Environment Integrity Group) 협의

- 향후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에 대비 EIG입장을 정리(한국이 6월말까지 초안 마련), 금년 11차 당사국총회에서 제시기로 결정

※ 리히텐슈타인, 모나코는 불참

IV 평가 및 향후 대책

1. 관찰 및 평가

□ Post Kyoto 체제에 대한 동향

- 정부전문가 세미나(5.16~17)에서는 Post-Kyoto 체제에 대해 단편적이고 원칙론적인 각국의 입장만 발표된 상태
- 그러나 COP 11에서는 Post-Kyoto 체제의 원칙 및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토대로 Montreal Mandate 채택 가능

※ '0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관한 의정서를 '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한다는 Berlin Mandate('95년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)에 따라 '97. 12월 교토의정서 채택

□ 합의가 되지 않은 의제에 대한 논의

- 기후변화특별기금 운영 방안, 국제항공 및 해상운송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부문의 교토의정서 포함 여부 등 금번 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한 의제들은 COP11에서 논의 예상

2. 향후 대책

□ Post-Kyoto 체제에 대한 각종 구상에 대한 연구 및 대책 수립 필요

- 1차 공약기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식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('05.11)
 - 현재 외교부, 환경부, 산자부, 에경련, KEI 등이 공동으로 대책 마련 중
- CDM과 연계된 EU 배출권거래제 확대적용 가능성 및 철강, 석유화학, 시멘트 등 산업부문별 감축방식(Sectoral Approach)에 대한 연구 분석 추진(산자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 추진)

□ 쟁점사항별 협상대책 준비 강화

- 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는 COP 7 이후 채택된 교토의정서 이행에 관한 각종 결정문 초안이 최종 승인될 예정으로 의제별 종합적 재검토 필요

□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강화

- 양자 실무협의를 통하여 합의된 기후변화 대응관련 협력 추진
 - 미국과의 메탄가스 저감 파트너십 가입 절차 마무리('05.6) 및 구체적 협력 방안 마련('05.11), 배출권거래제 연수인력 파견 추진('05.10)
 - COP10시 체결된 한·멕시코 양해서(온실가스 배출 통계, 국가보고서 작성 등 기후변화 대응관련 전문 분야의 과학적, 기술적 협력) 분야별 구체 협력방안 마련('05.9)

- 캐나다와 CDM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및 구체 협력 사업 발굴 추진('05.8)
- 중국, 인도, 멕시코, 브라질, 남아공 초청 기후변화 대응 워크숍 ('05. 10월 예정, 서울) 개최 준비
- EIG 환경장관 회담 개최준비 협의(COP11 및 COP11/MOP1 회의 중에 개최)
- 비부속서 1국가 국가보고서 작성 전문가그룹(CGGE) **훈련워크숍** ('05. 9. 26~ 30, 서울) 개최
- COP11, COP/MOP-1에 대비한 EIG 국가 입장 정리 및 협의
 - 외교부 주관으로 환경부, 산자부 및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추진